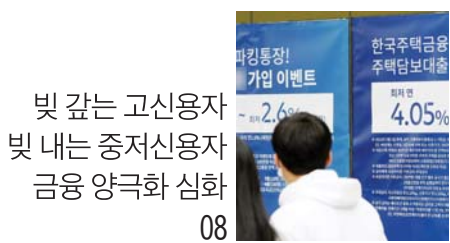


9일 Market Index			
코스피	2510.06	코스닥	835.85
	(-3.15)		(-6.43)
금리 (한국예 9년)	3.256	환율 (원·달러)	1323.90
	(-0.005)		(+2.50)



빛 갇는 고신용자
빛 내는 중저신용자
금융 양극화 심화
08

韓美日 외교 ‘견고’, 3高 위기 경제 ‘불안’, 정치 ‘불통’

용산시대 1년

尹 대통령 성과·과제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 12년 만에 복원
영업사원 자처, 대규모 투자유치
野와 소통부재로 국정과제 제동
경제 복합위기에 저성장 등 과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시대를 뒤로하고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초의 출근길 약속회견을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보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1년을 앞두고 있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성과도 필요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 앞서 선수 대표로부터 선수단 스카프를 받고 있다. /뉴시스

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재건 및 강화를 위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1년을 앞둔 9일 용

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2~4면>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 체결, 첫 국민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300억달러(약 39조

7440억원) 투자유치 등 이뤄냈다.

아울러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외교를 견고히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산업·경제·인적 교류 등을 추진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의 부재로 윤석열 정

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더욱이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의 및 만찬,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는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없어 매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를 비롯해 저성장까지 맞물리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전환, 규제 철폐 등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키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민관이 함께 복합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존엄하게 죽을 권리… ‘연명치료 거부’ 6년새 20배 늘어 174만건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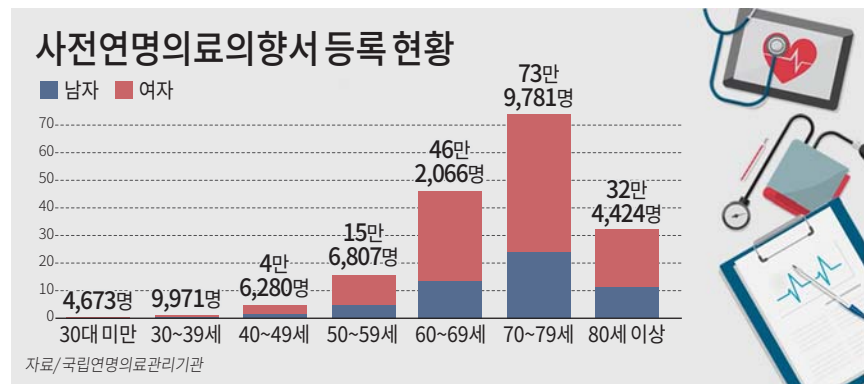
<上> 연명의료결정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계기로 무의미 연명의료중단 공감대 형성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호스피스 병상 등 공격 투자 절실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 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 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호스피스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합동참모본부, 미국 제임스 육군 참모총장 접견해 확장 억제 논의 /사진 뉴시스
▲ 박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보고 싶은 곳 검증” 당부

▲ 행안부, 지방 소멸 위기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촉구
▲ 개성공단 무단 가동 모습 확인… 폐쇄 후 처음



▲ 국방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 협의중 /사진 뉴시스
▲ 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8월부터 무기체계 도입 기간 절반으로 단축